

	보도자료 (2019. 5. 28 화) 국회미래연구원 http://www.nafi.re.kr (02) 786-2199	
---	---	---

13대 분야로 살펴보는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

- 「⑫ 정치행정」 분야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연구책임자 국민대학교 장승진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50년을 기준으로 정치행정 분야에서 발생할 주요 변화를 종합적으로 조망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수준과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해결능력의 측면에서 어떠한 시나리오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진은 이념갈등, 문화갈등, 정부신뢰, 지방자치, 전자민주주의 등을 미래 동인으로 설정하고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가능한 미래를 예측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정치행정 분야에 대한 종합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념갈등과 문화갈등의 수준은 낮추고 민주주의의 해결능력은 높이기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원은 기후·환경, 인구·사회 등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끝>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정치행정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02-2224-9810, jyh1974@nafi.re.kr)

국회미래연구원(원장,朴進)은 「미래 시나리오 및 정책변수 발굴」 연구의 13대 분야 중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정당학회(연구책임자 국민대학교 장승진 교수)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 정치행정 분야의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정치행정분야의 장기미래를 추동하는 핵심 동인으로 이념갈등 수준, 문화갈등 수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 지방자치의 수준, 전자민주주의의 진전 등으로 설정하고 미래예측의 방법론인 시나리오 매핑(scenario mapping)을 동원해 각 주요 동인의 극점과 동인들 간의 복합적 관계 및 돌발변수를 고려하여 2050년경 정치행정분야에서 발생할 미래 모습을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치행정분야 종합시나리오는 동인간 결합 시나리오의 재조합을 통해 공고화 시나리오, 정체 시나리오, 쇠퇴 시나리오 등으로 분류되었다. 3가지의 예측 미래 중 한국의 정치행정이 당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쇠퇴시나리오’인 것으로 평가된다. ‘쇠퇴시나리오’는 5개 동인이 현 추세에서 근본적 변화 없이 앞으로 그대로 연장되는 상황이다. 즉, 경제적 양극화가 악화됨에 따라 이념적 대립이 극심해지고 소수자 집단의 불만이 정치적 불안을 가져온다. 한편, 정치적 혼란이 제도적인 틀을 벗어나서 상시적으로 표출되지만 정치적 혼란과 사회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능력은 약화된 상황이다. 특히 이민자 등 문화적 소수자 집단이 경제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이들의 불만을 등에 업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정치적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동시에 소수자집단에 대한 반감을 활용한 극우정당이 등장하는 등 극도로 파편화된 정당정치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통제되지 않은 직접민주주의 확대는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제도적 틀을 벗어나 상시적으로 표출되게 하여, 중앙정부의 이념갈등 및 문화갈등에 대한 대응력을 급격하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본다.

반면 한국이 지향해야 할 ‘공고화’ 시나리오는 복지 확충을 통해 경제적 양극화가 해결됨에 따라 진보-보수 간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고, 문화갈등이 대두되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높은 수준

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온건 다당제에 기반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역할과 능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대중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것이다.

연구팀은 선호시나리오인 ‘공고화형’으로 경로를 전환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정당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미래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의 모습을 설계해가는 작업은 주체와 기관을 가리지 않고 한국 사회의 모든 주체가 참여해야 하는 작업이겠으나, 그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는 역할은 다른 어떤 주체보다도 정부를 대표하는 국회와 정당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당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에 관해서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연구위원은 “원내에서의 대표의 다양성을 늘려서 사표 발생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권자의 의사가 국회 의사 결정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해관계 집단이 원내에서 효과적으로 대표될 수 있도록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시나리오를 통해 2050년의 대한민국을 예측하고, 바람직한 미래로 가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18년부터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협의를 통해 미래 환경변수 13대 분야를 확정하고, 각 분야별로 내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11개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원은 기후·환경, 인구·사회 등 13대 분야에 대해 종합시나리오와 정책과제 분석 중심의 주요 연구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작성자 :

(위탁연구 총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김유빈
(02-2224-9802, ybkim@nafi.re.kr)

(정치행정 분야 담당) 국회미래연구원 정영훈
(02-2224-9810, jyh1974@nafi.re.kr)